

반도체 투자 33조로 확대… 송전로 지중화 70% 국비 지원

반도체 재정투자 강화 방안

첨특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비율 확대
비수도권 40~50%, 수도권 30~40%

건당 150억, 기업당 200억 한도로
소부장 중기·중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품목에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되는 등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총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꾸린 26조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에도 7조 원을 추가로 반도체 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에 쓰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 원)의 70%가량을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 투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

에만 4조 원이 들어 기업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 원 중 70%인 1조2600억 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 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 원 이상 ▲이차전지 10조 원 이상 ▲바이오(신설) 5조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에서 입자·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

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5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를 기존 17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0조+2조 ‘추경 12조’ 편성… 재해·재난에 3조 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임대주택 1000호, 저리자금 지원
기업 자금난 해소 정책자금 25조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해 4조 지원”

산불피해 수습 등에 쓰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0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12조 원대로 짜여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짜여질 전망이다.

12조대 정부 추경안

재해·재난 대응 3조여원
■재해대책비 기준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 2조원 반영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등)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여원
■정책자금 25조원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관세피해·수출 위기 기업 자금난 해소
■인프라·금융·R&D 등 2조원 이상 지원 확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여원
■공공요금·보험료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카드소비 증가분 일부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저소득층 청년, 최저신용자 등 정책자금 공급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회복 지원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야당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빠른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세종=김연세기자

“韓 경제, 낙폭치 않아 뭘 해야할지 집중해야”

그러면서 “기술 발전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나라의 문을 세계에 개방하고, 수출입국의 가치 아래에서 세계적인 국가를 건설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이것만으로는 한국이 이뤄낸 기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면서 “한국인의 DNA가 큰 역할을 했다고 확인한다. 끈질긴 생존 본능,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 기질, ‘우리’라는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 낸 집단 의식, 바깥으로 뻗어나가며 경쟁을 두려워 않는 개척자의 근성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미·중 패권전쟁이 돌연 시작된 것 같지만 이는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며 “빠르게 부상한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의 판도를 흔들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는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신먼로주의(아메리카 우선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정세의 급변, 다시금 움직이는 일본 경제, 미국이 중심에 선 중동 정세 등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유럽의 재 무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기회를 찾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대타협과 미래국가 생존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의지 회복과 경제·사회 구조개혁 등의 대타협을 이뤄내고, 규제혁명·기술혁명을 통해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생존본능, 승부사 기질, 강한 집단 의지, 개척자 근성, 그리고 기적을 일궈낸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한덕수 경선 불참에도 ‘견제구’… ‘반명 빅텐트론’ 거론도

한 권한대행 ‘무소속’ 출마 가능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제2의 윤석열’ 경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이날 오후 5시였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날 선 반응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에 한 권한대행이

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함께하는 ‘제3세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도 거론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맥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는데 그게 되더니”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날아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한 권한대행도 정치에 입문할 수 있기 때문에 ‘태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공직자는 선거한 달 전에 사퇴하면 되므로, 한 권한대행이 오는 5월3일 이전에 사퇴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에서는 ‘반명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 측이 ‘반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만일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를 포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반명 주자까지 참여하는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는 허상이다. ‘반명’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그냥 당권경쟁에 밀려난 비당권파들끼리의 연합을 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티끌 모아 티끌이고, 모여봤자 텐트는커녕 천한 조각 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syj@